
100대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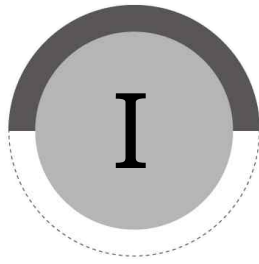
2020년 9월

대한민국 정부

순 서

I . 국가비전 - 국정목표 - 국정전략 1

II . 100대 국정과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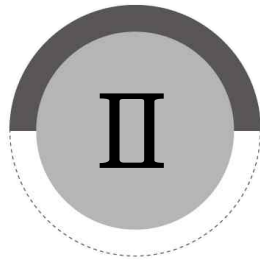


국가비전 - 국정목표 - 국정전략



I. 국가비전 - 국정목표 -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권의 쫓붙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2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9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6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100대 국정과제



II.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3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13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14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15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16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17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17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18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19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20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20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21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22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23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24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25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25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26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27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31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31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32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33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34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35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36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37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8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38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39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40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41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42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3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43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44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45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정통부)	46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47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8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48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기재부)	49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50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51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52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53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54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54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55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56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59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59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60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61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62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63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64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65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65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66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67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68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69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70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71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72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72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73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74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75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76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77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78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79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80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80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81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82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83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84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84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문체부)	85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86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87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88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89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90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93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93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94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95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96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97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안부·국조실)	97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98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99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00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100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101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102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10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107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107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략권 조기 전환 (국방부)	108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109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방사청)	110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111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112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112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113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114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115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116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117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18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118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119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120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21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122	

I.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전략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 과제목표

-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 주요내용

- (국정농단 조사)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17년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 기대효과

- 국정농단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 복원
-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 과제목표

-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

□ 주요내용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운영, '18년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 및 '21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소송제도 도입·시행**
 - '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20년 공익신고자의 징계·행정처분 등 **책임감면 강화** 추진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21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체 구성** 및 '21년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 민관협업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19년)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21년 **내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

□ 기대효과

-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16년 52위)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과제목표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 (제주4.3 완전 해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 '17년에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 (과거사재단 설립) 과거사별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19년에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과제목표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유 보장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 '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 (방송 제작·편성)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 '17년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 마련, '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명예회복 지원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계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21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 '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 '18년 공적규제 축소 → '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 → '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등을 통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16년 70위)
-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 과제목표

-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이전계획 수립
- (주요인사 일정 공개)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 (인사시스템 투명화) '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 강화
 -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 상시 집중관리

□ 기대효과

-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 구현
-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한 국정운영 확립
-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 과제목표

-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인권 보호)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대효과

-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 기부·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과제목표

-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개막
- 개헌에 따른 입법조치로 정치개혁의 발전과 진전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 과제목표

-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 주요내용

- (혁신적인 열린 정부) '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21년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 제고
 - *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가칭) 제정, 지역 활성화지원 재원 조성, 소통협력공간 전국 확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정책박람회 정례화·지방확산 등 추진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행정 구현) '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 '21년부터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선도국가로 도약
 - * 정부신뢰도('17.7) : 한국 24%, OECD평균 42% / 사회혁신지수(Economist, '16) : 12위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과제목표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

□ 주요내용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 '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지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 (깨끗한 공직사회) '18년까지 재산 공개·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
 - '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 도입
- (차별 없는 균형인사) '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 '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혁신적 공직문화) '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 단계적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계급 확대
 - '18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 (공직사회 사기 제고) '18년까지 육아시간·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일선 현장근무자 위험직무 재해보상 강화 및 후생복지 개선

□ 기대효과

- 공정·투명·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 과제목표

-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해외 위난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체계 수립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 지원 및 조사) 재외동포 국적 불문 고향 방문 정상화,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동원 동포 지원
 -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공동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검토
- (재외공관) '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폭 강화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 과제목표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주요내용

-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보상금·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추진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정신 확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 발굴 사업 추진
- (국제보훈 사업) '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현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과제목표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 (열린 공공기관) '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
- (평가체계 개선) '17년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 (지방 공공기관 혁신) '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 과제목표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1년 시범 실시를 거쳐 '22년 전면 실시
- (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 (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기대효과

-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 정립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 과제 목표

-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

□ 주요 내용

- (공동체 예방치안) '17년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

* △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 (치안인프라 확충) '17년부터 치안 R&D 활성화(육안 미확인 법광원,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제주 등 11곳) 합동 감정체계 구축, 의무경찰 단계적(5년)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 근속승진 단축 등 경찰 처우 개선, 교정시설 과밀화 단계적 해소

□ 기대효과

- 치안R&D,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과제목표

-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

□ 주요내용

- (특별기구 설치) '17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국회 보고
- (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
 - 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
 -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
- (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 위한 세제지원 신속도입
 -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임대료 자발적 인하 세제 인센티브 등 도입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상향,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등 소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운영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 적극 뒷받침

□ 기대효과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

Ⅱ.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과제목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일자리상황판 설치·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관리
 -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예: 광주, 밀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 과제목표

-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의 의무비율 평균 5% 달성 추진,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등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명당 연 9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21년까지 38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발전
-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재취업 원활화
-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 보호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대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대책 추진

□ 기대효과

- 실직·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 과제목표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
-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 주요내용

-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위기극복·경제회복 관련 대책 마련,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뉴딜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가동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17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코로나19 확산 및 내수위축 우려에 따른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
 -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 마련·추진, 농수산물 소비 증대 등 소비증대 방안 마련 및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빠른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도모하고 한국판 뉴딜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 과제목표

-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 주요내용

-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추진
-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년)

□ 기대효과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권익 보호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과제목표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주요내용

-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과제목표**

-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 기술유통,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
-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20억 → 폐지)

□ **기대효과**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 과제목표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주요내용

- (총수 일가 전횡 방지) '21년까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권 심사 강화
-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20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사익편취 근절) '20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 (금산분리) '20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 기대효과

-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과제목표

-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주요내용

-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 조직·인력 확대 검토
- (지자체 협업) '21년까지 범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21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추진

□ 기대효과

- 신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범위반행위 억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 과제목표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 주요내용

- (법·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희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과제목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21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
 -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년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이익공유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19년부터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선정, 대·중소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 기대효과

-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3차 이상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 ('16년 중기중앙회 조사 - 1차 협력업체 90.4%, 2차 85.6%, 3차 이상 82.4%)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 과제목표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확대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및 확산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특화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17년 105만명)
- (골목상권) '18년 생계형 적합업종 및 '20년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수익성·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5만명 양성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 주요내용

-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 (코로나19 대응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보증 확대

□ 기대효과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 과제목표

-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
-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공직자가 입증토록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국민생활 불편·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추진
- (생명·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17년부터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 제외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년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소비자·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기대효과

-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 도모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토부·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 주요내용

-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 (광역교통청 신설)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급행철도)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을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추진**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 기대효과

- 수도권 지역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확보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과제목표

-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 주요내용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년 표준운임 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 (SOC 안전 강화) '17년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 수립,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노후도로 개선
 - 도로, 철도, 공항, 하천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SOC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
- (코로나19 극복) 범부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항공 등 교통 업계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비대면 경제 확산을 고려하여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종사자·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 '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 기대효과

- ICT·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
-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학기술부·국토부·복지부·기재부)

□ 과제목표

-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친환경·스마트카)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 (제약·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 (드론산업)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 *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Standards on Demand)
- (미래 성장동력)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화 추진
- (디지털 트윈) 5G·자율차 등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도로·지하공간 등 시설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 및 고해상도 지도 구축
- (K-방역 국제표준화)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 모델'을 3T(Test-Trace-Treat)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18종)으로 제안

□ 기대효과

-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 주요내용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사업·인력·예산·과제·성과 등 모든 정보
- (과학기술 역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발전·국제협력·국민소통 등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추진
 -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집중투자 및 맞춤형 전략수립·성과관리, 신속한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등

□ 기대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
-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걱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 기대효과

-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
- 청년·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
-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추진('20년 누적 1,100만호, '22년 누적 1,500만호)
-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
 -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그린뉴딜)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AMI) 보급, 풍력 실증사업 추진 등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 (수소)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수소 경제 3대 전담기관 선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과제목표

-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지원

□ 주요내용

-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 (소부장 강국도약)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19년) 및 2.0전략 수립('20년) 등으로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 R&D 집중투자,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추진
-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주요 위기 업종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MB필터 수급 관리 등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지원

□ 기대효과

- 매년 5천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 '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 과제목표

-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 주요내용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 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코로나 이후 유망 스타트업 지원·육성,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 추진

□ 기대효과

-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 과제목표

-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R&D)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기간 확대 등
- (중소기업 자금조달)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 (성장사다리 구축)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 정부 법령·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개선
- (위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도심 중소기업 밀집지역 또는 역세권 등에 대한 **그린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창업·혁신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기대효과

- '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16년 9.2만개 → '22년 11만개)
- '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5만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 일자리 창출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 과제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 주요내용

-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명당 연9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우수 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

□ 기대효과

- '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2년 2.3%(21만명)까지 완화
-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Ⅲ.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전략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대상 확대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 과제목표

-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 주요내용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예방적 건강관리) **전 연령 대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 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 기대효과

-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 '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 과제목표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 주요내용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 (의료격차 해소) 전국을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300병상 내외의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육성하여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연계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 '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체계) '23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감염병 연구 및 글로벌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치,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진단기기 등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 (방역체계)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 대한 기록 및 방역 분야별 분석·평가,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 여건 마련 및 대응 기반 구축

□ 기대효과

- '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15년 30.5% → '21년 25%)
-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 과제목표

-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기대효과

-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과제목표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

□ 기대효과

-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안정 강화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과제목표

- 아동 양육 친화적, 가족 다양성 포용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 기대효과

- 청년·여성·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출산율 감소 추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인프라 기반 마련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 과제목표

-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 (고교 무상교육)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 기대효과

-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 주요내용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국가교육회의('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 (기초학력 보장) '20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 (혁신학교 등 확대) '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18년)
-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
 - *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
 -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대입정책 예고제(3년 6개월 전) 법제화('17년)

□ 기대효과

-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 과제목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원칙)
 - ** 취약계층 선발 비율 : (현)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관리(’17년~)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주요내용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기대효과

-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 과제목표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지원기능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 기대효과

-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지식정보·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운영(’18년~)
 - STEAM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 (미래사회 대비 원격교육체제 구축)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원격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교육과정 및 내용 등 혁신 도모**

□ 기대효과

-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 과제목표

-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안전복지) 국민안전권 실현을 위한 「(가칭) 안전 기본법」 제정
 -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 (교통 안전)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 (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험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 (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 '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16년 50초)
- (화재 안전)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스마트 기상정보) '17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19년) 및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 기대효과

-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15년 1.9명)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

□ 주요내용

-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소방) '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 (해경) '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 (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1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 (재난조사·치료) '22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20년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 과제목표

-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병원성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 (생활주변 위해·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역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강화) 야생동물질병 표준진단기법 개발('22년 20종 이상) 및 수입·전시·판매 기준 마련 등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강화

□ 기대효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 각종 생활 공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 주요내용

- (종합대책 수립) 국무총리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비롯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특별대책' 수립·추진
-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 (발전·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 (한중·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 기대효과

-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mu\text{g}/\text{m}^3$ (잠정, '16년 26)으로 개선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 주요내용

- (국토보전·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 보전총량 설정('21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21년)
-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
- (안전한 물환경)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
 - **물관리 일원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km),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
- '21년까지 물 공급 안전율(지자체 중 물부족 제외한 비율) 87% 달성('13년 62%)
- '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 60%, 동물 등록 200만 마리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 · 원안위)

□ 과제목표

-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 주요내용

-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 · 대표성 확보
-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18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19년)
-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 기대효과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 과제목표

-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 주요내용

-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21년~)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
 -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 (녹색경제 전환 및 자원순환체계 개선) **환경분야 유망기업 지정(50개,~’22년)** 및 스마트생태공장 조성, 녹색금융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촉진
 - 유통포장재 감량(포장기준 마련, ’21년), 플라스틱 선별·재활용 강화, 불법 폐기물방지대책 마련 등 자원순환성 강화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

□ 기대효과

-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과제목표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

□ 주요내용

- (해양영토 수호) '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 '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 설치
- (불법조업 근절) '17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22년 육·해·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 (섬 관리 강화)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 (해양안전 강화) '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 '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1년 전국망 운영 및 '22년 전국망 운영·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하고 노후여객선 비율을 15%('17년 29%) 까지 감축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과제목표

-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 주요내용

- (노동존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7년에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
-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 금지 분야 및 결사의 자유 분야 핵심협약 비준 추진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체불·부당해고 구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20년),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22년)
-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및 청소년, 근로자, 사업주 등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기대효과

-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 침해 행태 근절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 과제목표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 (취약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 기대효과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완화
-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제고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과제목표

-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 (여성 대표성 제고) '17년부터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행**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17년~)
-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운영**
 - '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연구사업 체계화

□ 기대효과

-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 마련
-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 제고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 과제목표

-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 주요내용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300만명 달성
-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존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및 지원)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에 따라 온라인 공연 등 비대면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문체부)

□ 과제목표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 과제목표

-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공정한 제작·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 * (영화) 제정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정 (만화웹툰·2차적 저작물) 계약서 보완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서 제정 (방송)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확대*
 - *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장르융합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홍릉시연장, '17년 홍릉) 실험적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VR 위주에서 타기술 기반 확대
-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쌍방향 문화교류 및 착한 한류 실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
 - '22년까지 현재 6천만명 한류팬을 1억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학당 지속 확대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 과제목표

-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미디어복지) '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22년까지 1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 (지역방송 활성화)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 (미디어산업 성장) '17년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미디어·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17년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에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 '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기대효과

-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
- 방송시장 균형발전 및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제고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 과제목표

-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 주요내용

-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육아·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 기대효과

-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15년 근로시간 : 한국 2,071, 멕시코 2,346, 일본 1,734, OECD 평균 1,691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 주요내용

- (생활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
 -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홍보

□ 기대효과

-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제고 및 국민통합
-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 주요내용

- (관광여가 사회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 지속
 -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
-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육성
- (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3대 전략시장(일본, 非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 기대효과

- ’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
-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IV.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 과제목표

-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자치분권 기반 확보) '21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제고
-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20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확대
- (마을자치 활성화) '21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 기대효과

-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 과제목표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지역 소비·고용 창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비진작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기대효과

-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 과제목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 주요내용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 확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 마련
 - 발행체제 연구·의견수렴('18년)을 통해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19년~)
-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21년)
-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현장과의 소통·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 기대효과

-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 중장기적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시스템 구축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과제목표

- 행안부·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실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안부·국조실)

□ 과제목표

-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 강화
- (세종시 육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추진
-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산업단지 혁신)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생활SOC 확충)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
- (지역산업 육성) **지역산업 재건 및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력산업위기 사전예방’ 프로젝트 추진

□ 기대효과

-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
-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 생활SOC 확충, 지역산업 재건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 과제목표

-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요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선정·지원
- (지역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컨설팅 등 지원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17년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18년부터 본격 공급
-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기대효과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과제목표

-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한국해운 재건) '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 '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
- (해운·조선 상생협력) '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 '17년부터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 (물류망 확충) '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및 '19년 완공, '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

□ 기대효과

-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16년 29조원)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16년 47만TEU) 달성으로 해운강국 위상 회복
- '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등을 통해 해운-조선 상생구조 확립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 주요내용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기대효과

-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 주요내용

-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받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보급

□ 기대효과

-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 주요내용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2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과제목표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우리 바다 되살리기) '18년 휴어제, '20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21년 전자어구 실명제 시스템 개발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
 - '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하여 '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
-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
 - '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 (안전한 수산물 공급)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300개소 등록
 -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및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
- (해양공간 통합관리) '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8년 남해안부터 '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 '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 기대효과

-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
- 해양공간(44만km²)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V.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WMD 대응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를 책정,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핵·WMD 대응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전략표적 타격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
 -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 기대효과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대응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 과제목표

-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

□ 주요내용

-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조기 전작권 전환
 -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 보완·발전
 -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
 -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군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
 -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

□ 기대효과

-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 과제목표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추진
-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 (군 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관·군 통합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재난·테러 등 위협별 대응역량 강화

□ 기대효과

-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방사청)

□ 과제목표

-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 강화
-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 구축
 -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 미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과제목표

-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 강화
-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 기대효과

-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 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 과제목표

- 남북 간 경험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등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현

□ 주요내용

-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험벨트 건설
 - 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생활공동체 형성
-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의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고,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광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진
- (남북접경지역 발전)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 (남북 생명공동체·평화공동체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병, 재난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추진
 - 보건의료·방역, 농어업 분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

□ 기대효과

-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험의 허브로 도약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 과제목표

-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 주요내용

-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 남북회담 체계화·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 **국회 비준동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 기대효과

-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발전
-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이행의 제도화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상봉정례화·교류 다각화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원칙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노력
-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 기대효과

-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 과제목표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지자체 자율성 확대
-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 주요내용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 추진
- (제도 개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 기대효과

- 교류협력 재개·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접근성 강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 과제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소통·참여, 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통일국민협약)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모색 병행
- (통일센터)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수행
- (차세대 통일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 강화
-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 기대효과

-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 확대
- 통일 논의 활성화 및 미래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과제목표

-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주요내용

-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 과제목표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추진
 -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 기대효과

-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의 참여·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 과제목표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동맹, 한·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관계, 한·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 주요내용

- (한·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
 -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 (한·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 (한·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 기대효과

-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안정·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 과제목표

-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

□ 주요내용

-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 간 협의회 정례화·제도화 모색
 -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 MIKTA 지속 추진·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시도**
-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 수준)
 -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 기대효과

-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번영 공간 확대
- 한반도·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 과제목표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 주요내용

- (경제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주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협력 선도

□ 기대효과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 대미·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

□ 주요내용

- (한미 경제협력) 한미 FTA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투자 발전
 - FTA 개정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 대비
-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력채널 재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 * 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 RCEP* 및 한중일 FTA 적극 참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 수행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한·중·일·호·뉴·인 등 16개국 참여
- (거대 신흥시장 개척) 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17.9)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
- (통상역량 강화)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해외 입국제한에 따른 기업인 애로 해소, 수출 기업 금융 및 물류 애로 대응

□ 기대효과

- 주요 수출시장인 미·중과 경제협력 확대, ASEAN·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 유지